혁명에 관한 이야기 - 3
산업혁명 下

글. 김인겸 역사문화칼럼니스트

산업화 vs. 근대화

지난 3월호에서 산업혁명의 개념과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 생각해보며 말미에 산업혁명이 일상에 끼친 영향을 '산업혁명 하편'에서 다룰 것이라고 적었다.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거대담론에 속하면서도 실제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 미시적 차원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한 현상이다. 즉 산업혁명은 일상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문화,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바꾼 역사의 주요 변곡점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화' 혹은 '근대' 담론을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40대 후반,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근대화는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로도 기억될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집권한 시기인 1960~1980년대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시대적 요구였다. 다만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정권은 또 다른 시대정신이었던 민주화에 호응하지 않으려 했고, 그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일정 부분 왜곡되었고 불완전하게 진전되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산업화'와 '근대화'의 개념 범위를 비교해 보자.

산업화는 말 그대로 생산공정에 기계화·자동화를 도입하여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화가 가속화하면 할수록 산업화는 생산공정에만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산업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면 산업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이 산업화에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요인이자 촉매,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산업화는 산업과 경제 부문의 일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영역과 맞닿으며 사회 전반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이 같은 현상이 특정 시기에 압축적으로 일어날 때 산업화보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적절해 보인다. 또 근대화라는 용어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모던보이와 모던걸을 소개한 당시 신문기사,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는 신식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 출처 : 위키피디아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교역의 욕구는 커진다. 생산자는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을 필요로 하고 능력껏 만들어 팔 자유를 요구한다. 개인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 확대된다. 국가가 산업과 교역을 통제하던 절대왕정에 맞서 상공업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행한 계층이 자본가로 성장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로 자본주의가 주요 경제사상으로 부상하였다.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할 때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이행기에 여러 사건을 집어넣는다. 르네상스, 산업혁명, 시민혁명과 함께 자본주의 발달도 근대로의 이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다. 그러니까 근대화는 산업화를 비롯하여 자본주의화, 민주화 등 다른 정치·경제적 변화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는 두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산업화를 경제에만 국한해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국의 산업혁명 - 한국전쟁 이전

산업화와 근대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5월호부터 살펴볼 서구의 시민혁명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서구 국가에 비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싫든 좋든 외세의 영향은 중요한 변수였고, 근대화의 또 다른 축인 민주화와의 병행 정도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며 한국의 산업화는 다이내믹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산업화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일명 강화도조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후기 들어 상공업이 발달했으나 조선의 산업 기반은 농업에 있었고, 정치·사상적으로도 성리학 외의 다른 유학 사상은 이단으로 취급하여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우리가 현재 실학자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유학자로 규정했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조선왕조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 지배층 스스로 근대화를 추진하거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이 실권을 잡은 적 없이 외세의 압력으로 근대화의 요구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1882년의 갑신정변은 국제정세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한 설익은 청년 엘리트의 위로부터의 근대화 시도가 실패한 사건이고,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을 주동한 세력은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는 올렸지만 근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고 정부가 추진한 갑오개혁, 을미개혁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올렸으나 외세의 방해와 정권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근본적인 혁신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추진했던 광무개혁도 군사력 강화가 빠진 전제군주제 개혁이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대한제국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한 채로 20세기를 맞았다.

일제 강점기는 주체적 근대화가 원천 봉쇄된 시기였다. 일제의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견해일 뿐이다. 일제의 식민지 경영의 제1 목표는 수탈이었지 개발은 아니었다. 소나 돼지, 닭을 키우는 목축업, 양돈, 양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해방을 맞이하여 일제가 의도치 않게 남긴 산업 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적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기도 전에 남북분단이 되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남북 모두 심각한 인명 피해를 겪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도로, 공장, 항만, 발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은 거의 다 파괴되었다. 요컨대 전쟁이 끝난 1953년의 한국은 당시 외국에서 세계 최빈국으로 여겼다는 평가를 굳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아무 기반도 없는 영(零)의 상황이었다.

한국의 산업혁명 -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산업화를 추진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4·19혁명으로 들어선 제2공화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되고 말았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산업화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을 국시로 내걸어 북한과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하여 국내정치에서 여론으로 통일하고 정적을 견제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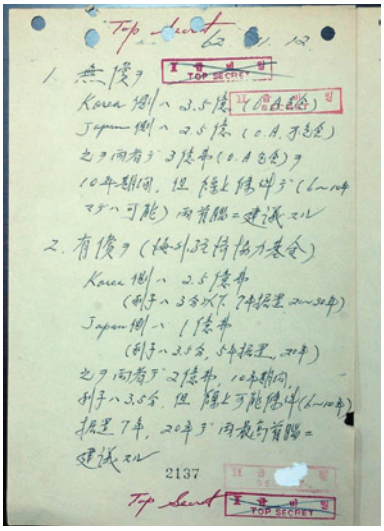
작년부터 불거지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이 무리해서 맺은 한일협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부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1964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듬해인 1965년에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다. 지금도 문제가 되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포기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총액 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반공정책과 산업화정책에 대한 생각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1월 18일에 발표한 새해 연두교서에 일목요연하게 집약돼 있다. 아래는 '조국근대화로 통일 달성'이라는 제목의 당시 중앙일보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① 조국근대화를 남북통일을 위한 중간목표로 삼고 있다. ② 동남아를 제1의 안전권으로 삼아 월남지원을 계속하겠다. ③ 안정기조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 ④ 한·일 국교타개에 따른 민족주체의식의 확립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한다. (중략) ⑦ 경제건설을 통해 1970년대까지 국민소득을 배가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겠다. ⑧ 올해를 다시 「일하는 해」로 삼았으며 ⑨ 금년이야말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제2차 경제개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도약의 발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는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경제개발이었고, 반공을 모토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양쪽을 설정하였다. 또 당시의 경제개발은 노동자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거점 성장전략이었다. 즉 저곡가 정책과 저임금 정책을 연동시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다수의 노동자를 저렴한 인건비로 써서 경쟁력을 키운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달성한 성과는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산업화 덕에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상대적 빈곤과 분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재벌 대기업



1962년 일본 도쿄의 외무성 별실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가 한일협정 담판을 위해 만나고 있다. 아래는 김종필-오히라 메모이다. / 출처 : 한국일보

1970년 포항제철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왼쪽은 박태준 사장 / 출처 : 위키피디아

1987년 울산의 노동자 대투쟁(좌, 출처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과 1997년 IMF 사태 당시 금 모으기 운동 모습(우, 출처 : 허핑턴포스트)

중심의 거점 성장전략 또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더디게 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까지는 정치적 민주화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더욱 시급한 당면과제였고, 19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고도성장 시기였던 만큼 산업화의 질적 측면과 근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쟁점화되지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은 지금도 주목되는 사건이나 그 직후 7월부터 9월까지 벌어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상대적으로 잊힌 감이 없지 않다.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 1987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치와 경제의 만남

정보통신기술을 인민 통제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국 정부의 사례도 있지만, IT 기술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김대중 정부가 지식정보화 정책을 과감하게 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구사회는 가깝게는 18세기 멀게는 16세기부터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총체적인 근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인 변화도 있었고, 반동적인 상황에도 직면했지만 크게 보아 장기적으로 천천히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남북분단에 이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 동안 추진하였고, 시민사회 중심의 근대화로의 전환도 미흡하나마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략하게나마 조망해본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보면 경제 부문은 결코 독립되어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역으로 정치 부문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순수한 정치 영역에서만 다뤄질 수 없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역시 정치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자유로운 자율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시민주체이다.

5월호부터는 유럽과 미국의 시민혁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시대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는다.